

미국 오바마 정부의 국토정책 어젠다

국토연구원 이원섭 연구위원

- 변화를 통한 새로운 미국 건설을 기치로 출발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일인 2009년 1월 20일을 ‘부활과 화해의 날’로 선포하고 새로운 세기를 향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돕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
-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탈출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, 가계경제 보호, 주택소유자 지원, 금융위기 해소에 역점
-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차세대 산업, 에너지, 인프라 등의 투자 확대와 살기 좋은 농촌 및 도시지역 개발정책 추진
 - 녹색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및 기술 개발, 바이오연료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산업 육성
 - 국가기간 교통인프라 및 차세대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의 성장기반 강화
 - 서브프라임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 및 주택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모기지 제도 개혁과 조세감면 지원
 -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농업·농촌대책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복지 및 교육, 인프라 투자 확대
 -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
- 미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, 지역개발, 국민통합과 사회복지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참고

※ 본 국토정책Brief는 백악관 홈페이지(<http://www.whitehouse.gov/agenda/>)에서 발췌, 정리하였음.

1.

- 2009년 1월 20일, 오바마 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서 출범
 -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침체로 2008년 한 해 동안 25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, 주가가 40% 폭락하는 등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
- 오바마 정부는 출범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변화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왔으며, 24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를 설정
 -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경제정책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, 가계경제 보호, 주택소유자 지원, 금융위기 해소에 역점

2.

● 녹색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동력 육성

-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및 환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
 - 차세대 기술혁신 및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기금(Advanced Manufacturing Fund) 신설
 - 제조업 확대 파트너십 기금(Manufacturing Extension Fund) 출연을 두 배 증액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보급하여 기업의 성장역량 강화
 - 에너지 및 환경산업에서 5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바이오연료, 플러그인 자동차, 재생에너지 상용화, 석탄발전소 배출저감, 디지털 배전망 등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
- 에너지 독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
 - 석유소비를 절감하여 10년 이내에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, 2015년까지 1갤런당 주행거리 150마일의 플러그인 자동차를 100만 대 보급
 - 청정에너지 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2년까지 10%, 2025년까지 25%로 확대하고, 향후 3년 동안 대체에너지 생산을 두 배 증대
 -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% 감축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총량거래(cap and trade) 프로그램 시행

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및 정보 인프라 투자 확대

- 미국의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고속도로, 교량, 도로, 항만, 공항, 열차 등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
 - 교통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투입하여 전국 인프라 재투자 은행(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) 설립
 -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연간 35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
- 차세대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(Universal Service Fund) 개혁, 무선망 효율성 제고, 신기술 및 응용기반 확충, 조세 및 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

● 주택소유자 부담 경감 및 모기지 제도 개혁

- 모든 주택소유자를 위한 10%의 모기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연간 소득 5만 달러 이하인 1천만 명의 주택소유자들에게 평균 500달러의 공제혜택 제공
 - 주택 모기지 대출 희망자를 위한 간편하고 표준화된 점수제(Homeowner Obligation Made Explicit Score)를 도입하여 모기지상품 비교와 대출상환 정보 제공에 활용
- 모기지 회사의 파산법을 개정하여 파산법원이 개인의 모기지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의 위험하고 부도덕한 사업관행 방지
 -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모기지 사기 중지법(STOP FRAUD Act)을 통해 법 집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사기범의 처벌 도입

●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

-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 보장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농업·농촌정책 추진
 - 가족농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을 정비하고,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립하여 국산 농산물을 우대하며, 협동마케팅과 농업인의 사업체 설립 지원
 -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 농산물 인증을 지원하고 농작물 보험을 개혁하며, 지역식품체계(Regional Food System)를 구축
 -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, 신입 농업인의 농장 취득을 지원하는 조세 인센티브 제공

■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 및 교육, 인프라 투자를 확대

- 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대등한 수준의 수가를 보장하고, 농촌지역 의사 및 간호사를 위한 채무탕감 프로그램을 도입하며, 원격진료 등 보건정보 기술을 육성
- 농촌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유능한 청년 인력의 교직 종사를 지원하고, 주립(land grant)대학의 연구 및 교육 지원금을 인상
- 농촌에 광대역 정보망을 구축하고, 도로, 교량, 댐, 수로, 공항 등 인프라 투자 확대

●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발전 촉진

■ 백악관에 도시정책실(White House Office of Urban Policy)을 설치하여 대도시권 전략을 개발하고,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강화

- 지역개발 포괄보조금(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)을 확충하여 빈곤계층 및 지역의 주택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지원
- 대도시 지역의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염가주택 신용기금(Affordable Housing Trust Fund)을 신설하고, 공공주택 운영비 보조 제도를 복원

■ 대도시권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

- 대도시권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하고,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을 두 배 증액하며, 제조업 집적지를 청정기술 선도지역으로 전환
- 지속가능한 도시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교통투자에 스마트 성장을 고려하고, 미국 탄소배출의 40%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개선
- 건강한 도시 만들기 법률(Healthy Places Act)을 제정하여 도로, 건물, 공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, 신규 정책과 고속도로, 쇼핑센터 등의 주민건강 영향을 평가

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

■ 새로운 미국 건설을 위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, 도시 및 농촌개발 등의 정책기조는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의 새로운 정책 동향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및 녹색산업 육성, 지역개발, 국민통합과 사회복지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참고할 필요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이원섭 연구위원 (wslee@krihs.re.kr, 031-380-0156)